

폐기물문제와 포장폐기물의 관리

-포장산업과 환경 정책

심 무 경 / 환경처 폐기물제도과 사무관

사람의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물자를 소비하는 양이 많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폐기물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어 이에 비례하여 폐기물의 발생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폐기물에 있어 포장폐기물도 큰 기여를 하고 있어 현재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포장폐기물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 1990년도의 경우 전체 쓰레기의 1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외국(미국 32%)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현재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외국과 같이 포장폐기물이 전체 쓰레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포장폐기물은 이와 같이 양의 측면 뿐 아니라 그 재질면에 있어서도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는 장기간 변하지 않는 안정성과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그 사용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폐기물로서 처리하기 매우 곤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플라스틱 폐기물은 무게가 가벼우면서 부피가 많이 나가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각처리시 높은 발열량으로 소각로의 기능에 무리를 주거나 소각시 다이옥신 같은 유독가스 등이 방출되기도 하고, 매립지에 들어가더라도 좀처럼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쓰레기'가 되고 만다.

폐기물 관리정책의 핵심은 우선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일단 발생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별도의 장으로 제정하면서 폐기물의 관리를 종래의 처리중심에서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을 기하였다. 이에 따라 포장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시책도 필요 이상의 이중 또는 과대포장을 억제하면서 환경

에 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진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흔히 채택되고 있는 정부의 시책유형은 이중·과대포장의 억제, 특정 재질의 사용금지 등 포장재질의 규제, 포장세 도입,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하여 주로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왔으며, 정부차원에서 이렇다 할 법적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1991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시행령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설정의 근거를 둔과 동시에 사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촉진규정을 마련·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의 포장상태 및 소비자의 상품포장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이를 토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작성 관련업계, 단체,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26일 동규정을 확정·고시하였다.

이 규정은 권장 규정으로 당장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업체의 노력, 소비자의 환경보전운동 등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지난 12월 8일자로 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의무·규제조항의 세부시행사항 제정에 기초가 될 것이다.

폐기물 문제는 너와 나를 가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자 공동의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고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천할 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